

1. 중국의 국내정세

※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01 중국 경제 동향

■ 중국 공무원,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방안 발표(1.14)

- ▶ 중국 국무원은 2015.1.14(수) 공무원 연금보험 개혁방안인 <기관·사업단위 종사자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이원화된 연금보험 관리제도를 하나로 통합함.

※ 중국의 연금보험제도는 건국 이후 줄곧 단일 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해오다가 1997년부터 공무원 연금보험과 기업퇴직자연금보험으로 분리됨. 이때부터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서 퇴직 후 정부재정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됨.

- ▶ 금번 통합으로 약 20년간 운영되어온 공무원연금보험제도가 폐지되고, '기본연금보험제도'로 통합되어 2014.10.1부터 시행됨(소급적용).

- 정부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법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사업단위 등에 종사하는 약 4,000만 명이 통합대상자(이하 '공무원'으로 통칭)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 금번 공무원연금보험제도의 개혁으로 공무원연금보험 가입자도 도시근로자기본연금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향후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신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됨.

- 연금보험료 납입비율은 가입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부부처 혹은 단위(회사)가 20%, 개인이 8%를 부담하며, 기준급여 최고한도는 현지근로자 평균급여의 3배로 하고, 최저한도는 현지근로자 평균급여의 60%로 함.

-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퇴직 후 월간 단위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퇴직 당시의 직급이나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됨.

- ▶ 한편, 금번 개혁방안에 따라 공무원은 통합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직업연금에도 반드시 별도 가입해야 함.

- 직업연금은 기본연금보험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일종의 기업연금보험이며, 보험료는 가입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부부처 혹은 단위(회사)가 8%, 개인이 4%를 납입하게 됨.

중국 인사부(人社部), 기업 퇴직자 연금 수령액 상향조정(경제일보, 1.16)

- ▶ 2015.1.15(목)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약칭 인사부(人社部))는 2015.1.1(목)부터 전국 기업 퇴직자 연금 수령액을 10% 상향 조정해, 8,000만 명 기업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예정임.

- ▶ 상기 조치는 2004년부터 11년 연속 실시된 것으로, 2004년 전국 기업 퇴직자 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47위안이었던 것에 반해, 2015년 전국 평균 수령액은 월 2,000 위안으로 증가할 예정임.
- ▶ 추푸링 중앙재경대학(中央財經大學) 사회보장연구센터 주임은 금번 조치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을 둔화 등을 감안하여 실시된 것으로, 매년 기업 퇴직자 연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발전성과를 전 국민과 공유하는 등의 중국 사회보장 제도 요구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 상기 조치 외에도, 도시·농촌 기초연금 운용 이래 최초로 도시·농촌 기초연금 가입자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매월 1인당 55위안에서 15위안 늘어난 7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시·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의 정부 지원금을 매월 1인당 320위안에서 60위안 늘어난 380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 2015년 중국 어업정책 중점추진 방향(중국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홈페이지, 1.12)

- ▶ 2014년 중국의 어업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발전 추세 유지
 - 3/4분기까지 어업생산액은 5,773억 위안(약 101조원), 부가가치 3,495억 위안(약 6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및 9.2% 증가
 - 11월 말 기준 수산물 총생산량은 5,37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그중 양식어업이 4,006만 톤으로 4.4% 증가, 포획어업은 1,371만 톤으로 3.2% 감소
 - 수산물 수출은 373만 톤, 19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및 7.3%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112억 달러 9% 증가
 - 어민 1인당 평균 수입은 14,426위안(약 252만원)으로 10.6% 증가
- ▶ 뉴둔(牛盾) 중국 농업부 부부장은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대회 정신에 따라 어업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엄격히 집행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함.
 - 三無어선(△어업허가증, △선박등록증, △선박검사증이 없는 어선) 등 위법행위 엄격단속, 불법어구 단속, 어업발전방식 전환 및 구조개선, 수산물 품질안전 및 어업생산안전 제고 등을 강조

■ 2014년도 중국의 대외무역 현황(중국해관총서/ 상무부)

1. 중국해관총서: 2014년 중국 대외무역 통계자료 발표(1.13)

- ▶ 1.13(화) 정웨성(鄭躍聲) 중국해관총서 대변인은 2014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이 4조 3,0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발표함.
 - 수출은 2조 3,4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고, 수입은 1조 9,6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여 총 3,82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 중국해관총서는 2014년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이 연초 목표치인 7.5%를 달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둔화를 제시함.

※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율은 3년 연속 정부 목표치에 미달함. 2012-14년 정부 목표치는 각각 10%, 8%, 7.5%였으나, 실제 증가율은 6.2%, 7.6%, 3.4%로 각 년도 목표치 대비 3.8%p, 0.4%p, 4.1%p 미달함.

➤ 2014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지역별, 기업형태별, 상품별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임.

- (지역) EU 및 미국과의 무역액이 안정적으로 증가, 신흥시장과의 무역액도 다소 증가, 일본 및 홍콩과의 무역액은 하락
- (기업형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대외무역액은 증가, 국유기업은 하락
- (상품) 주요 원자재의 수입량은 늘었지만 수입금액은 하락, 기계전자제품과 노동 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 소비품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

➤ 2014년 한·중 교역 현황(중국해관총서 통계 기준)

- 중국의 對韓 교역액은 2,905억 불로 전년 대비 5.9% 증가하여 중국의 전체 대외무역 증가율(3.4%)을 상회함.
- 중국은 한국에 1,003억 불을 수출하고 한국으로부터 1,902억 불을 수입하여 총 899억 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2. 쑨지원(孫繼文) 중국 상무부 대변인 브리핑(1.14)

➤ 쑨지원 대변인은 2014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수출입 증가율은 세계 주요 경제체 및 신흥 개발국보다 컸으며, 세계 제1위의 무역대국 위치를 유지하였다고 평가함.

➤ 2014년 수입 증가율 침체는 전체 교역규모 증가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 수입증가 속도가 낮아진 것은 벌크상품의 수입량 증가 및 가격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동 현상에 의하여 기업의 원가절감은 커지고, 기업의 이익과 국제 경쟁력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혜택에도 유리하게 작용

➤ 쑨 대변인은 국제 무역환경과 국내여건의 중대한 변화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대외무역 분야의 고속성장의 시기는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현재 이미 '뉴노멀(新常态)'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함.

3. 중국 상무부, 2014년 중국의 투자유치 통계 발표(1.15)

➤ 2014년 신설 외자 기업수는 23,778개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고, 실제 외자유치 금액(금융, 증권, 보험 등은 제외)은 1,195억 불(7,363.7억 위안)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 2014년 서비스업 투자유치 금액은 662.4억 불(4,068.1억 위안)로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고, 전체의 55.4%를 차지

- 서비스업 중 유통업과 운수업의 투자유치 규모가 비교적 컸으며, 각각 77.1억 불(473.7억

위안), 44.6억 불(273.5억 위안)을 기록함.

- 2014년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총 투자유치 금액은 15.2억 불(93.5억 위안)로 전년 대비 15.4% 하락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
- 2014년 제조업의 투자유치 금액은 399.4억 불(2,452.5억 위안)로서 전년 대비 12.3% 하락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를 기록
 - 제조업 중 △전자 설비업(통신설비, 컴퓨터 등), △교통운수 설비업, △화학원료 및 화학 제품업의 투자유치는 비교적 커서 각각 61.5억 불(377.4억 위안), 38.2억 불(234.7억 위안), 31.8억 불(195.1억 위안)이 유치됨.
- 2014년 상위 10개 국/지역(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투자유치 금액 합계는 1,125.9억 불(6,915.3억 위안)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고, 전체 투자의 94.2%를 차지
 - 한국과 영국에서의 투자금액 증가율이 높았으며, 한국은 39.7억 불(243.5억 위안)로 전년대비 29.8% 증가, 영국은 13.5억 불(83.3억 위안)로 전년 대비 28% 증가
 - 반면, 일본과 미국의 투자는 크게 하락하여, 일본은 43.3억 불(265.7억 위안)로 전년 대비 38.8% 하락, 미국은 26.6억 불(163.6억 위안)로 전년대비 20.6% 하락
 - 또한, EU 28개국의 투자도 68.5억 불(420.7억 위안)로 전년 대비 5.3% 하락하였고, ASEAN의 투자도 65.1억 불(399.8억 위안)로 전년 대비 23.8% 하락함.

세계은행, 2015년 중국 경제성장률 7.1%로 예상

- 세계은행은 1.13(화) “글로벌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 발표를 통해, 중국경제가 2015년 7.1%, 2016년 7%, 2017년 6.9%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 ※ 세계경제는 2015년 3%, 2016년 3.3%, 2017년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
- 동 보고서는 세계경제 회복추세가 약하고 양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바, 미국과 영국 등은 건실한 노동시장과 화폐정책 완화로 경제가 점차 활력을 띠고 있는 반면, 유로권과 일본은 경제회복세가 약하고 금융위기 가능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함.
- 보고서는 개도국들의 2015년 경제성장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그 추동 요인으로 △유가 하락, △미국경제 강화, △세계 이자율 지속 하락 등을 언급함.
 - ※ 개도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4.4%로 추산하였으며, 2015년 4.8%, 2016년 5.3%, 2017년 5.4%로 예측함.

02 홍콩 동향

■ 홍콩 행정수반 시정연설(1.14)

- ※ 령훈잉 홍콩 행정수반은 1.14(수) 홍콩 입법회에서 “법치 중시, 기회 장악, 선택 감행- 민주화, 경제발전

- ▶ 행정수반 직선제는 <기본법(基本法)>에서 비록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법률적 지위·효력을 지님.
- ▶ 홍콩대학 학생회 간행물 <學苑>은 2014.2월 <홍콩민족,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표지제목을 발행했고, 2013년 동 간행물은 <홍콩민족론>이란 책을 엮어 '홍콩 자립자결의 출구 모색' 등을 주장했음. 이 간행물들의 내용과 금번 시위를 주도한 학생 지도자 및 기타 관련 학생들의 틀린 주장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학생 지도자들과 결탁한 정계 인사들에게 충고함.
- ▶ 작년 12월 중앙과 체결한 <광둥·홍콩 내 서비스무역 기본 자유화 실행 협정>을 이행해 나가면서, 금년 말까지 중국 본토 전 지역과 시장 개방화 추진
 - 상하이 자유무역지구(FTZ)에 이어 추가 구축 예정인 광둥 FTZ에 홍콩기업들의 진출방안을 광둥성 정부와 적극 논의
 - 아시아 지역 내 경제무역사무소(ETO) 증설 및 중국 내 관련 사무소 추가설치 검토
 - <본토-홍콩 간 긴밀한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근거한 전문업계(법률·회계·심계·건축·엔지니어링) 발전 촉진
- ▶ 빈곤 완화, 노약자/소외계층, 노령연금 지원
 - 향후 10년간 매년 평균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 5년간(2014-19년) 정부 임대주택 77,100호 공급
 - 특히 임대주택 자격이 있는 빈곤층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공공주택 50% 지원 제공
 - '쑤시민 은퇴 후 보장계획'안, 하반기 사회여론 수렴 개시
 - 빈곤 노령층 지원을 위해 500억 HKD(약 7조원) 예산 확보
 - 법정 최저임금인 현행 시급 30 HKD에서 32.5 HKD로 인상(2015.5.1 실시)
- ▶ 노령화에 대비한 우수인력 확충
 - 對외국인 자본투자 입국제도 중단(2015.1.15 발효)
 - 해외 거주 홍콩 이민 2세대의 홍콩 취업·정착 유도를 위해 새로운 비자 시스템 도입
 - 해외 인재의 홍콩 입국 및 거주를 용이하게 하는 등 우수한 해외인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홍콩 주요 언론의 시정연설 평가

- ▶ (South China Morning Post) 링 수반은 중국-홍콩 정부 관계와 학생들에 대한

비난으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수반이 학생들을 더 자극하는 면도 있음. 금번 시정연설은 시민들이 지지해야 할 명확한 전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단, 민생과 관련해서 주요 이니셔티브는 없지만 주택 및 청소년 문제는 실용적임.

- (경제일보) 시민들의 금번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함. 정부의 급선무는 시위 후 크게 벌어진 정부-시민 간 분열을 봉합하는 일임.
- (명보) 시민들은 정치적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행정수반은 홍콩독립 경계 등을 언급해 정부-시민 간 정치적 갈등을 더욱 첨예화할 소지를 낳았음.
- (신보) 행정수반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논란이 되기에 아직 무르익지 않은 화제(홍콩 독립)를 언급한바, 향후 사회 광범위한 주목을 유도해 정치적 논란 확대 등의 역효과 가능성 있음.
- (문화보) 금번 시정보고는 민생, 경제발전을 고루 살피고,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문제, 은퇴 후 보장제도 등에 대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시켰음.
- (빈과일보) 행정수반은 학생조직이 만든 간행물 일부 내용을 시정보고에 포함해 학생들의 체면을 구겼는바, 홍콩 학생·시민들과 중국 본토 간의 모순을 더욱 악화시킴.

■ 2015년 홍콩 경제 전망(John Tsang 홍콩 재정부총리, 1.9)

※ 2015.1.9(금) John Tsang 홍콩 재정부총리는 '홍콩중화총상회 포럼'에 참석 및 발언

- Charles Yeung 홍콩중화총상회 회장, 리샤오자(李小加) 홍콩증권거래소 이사장, 홍콩중화총상회 400여 회원사 대표 등 참석

- 2014년 홍콩 경제는 2.2%의 미미한 성장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업률이 여전히 3.3%를 유지해 홍콩 경제가 양호한 인내력과 적응력을 구비하고 있음.
- 2015년 홍콩 경제는 불확실한 외부환경(유로존 및 일본 불안, 미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급락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선강통(선전-홍콩 주식시장 연계)을 위해 현재 필요한 것은 후강통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와 함께 선강통을 연구하는 것이며, 조속히 두 지역 간 증시가 전면적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기를 바람.
- 한편, 지난해 하반기 2달여 지속된 홍콩시위로 홍콩의 법치 기초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즉각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를 입은 부문에 지원 조치도 추진할 것임.

■ 홍콩 관련 중국언론 보도

1. '홍콩 독립', 황당하지만 웃고만 지나칠 수 없어(완구시보, 1.15)

- 령춘잉 홍콩 행정장관은 1.14(목) 임기 내 3번째 시정보고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홍콩의 '자립, 자체 결정(自立自決)' 주장을 비난함. 이는 '홍콩 독립' 주장이 이미 홍콩 주류사회에

경각심을 일으켰으며, 비록 황당한 내용이나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함.

- 홍콩은 자유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홍콩인들의 '홍콩 독립' 주장이 어떤 성격인지 단정 짓기 어려웠음. 그러나 자신들만의 '이론 토대'가 생기면서 일부 극단세력들과 주변 인물들이 '홍콩 독립'을 정치적으로 추앙하기 시작하였음. 그 동안은 '홍콩 독립'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응할수록 오히려 더욱 자극이 되어, '홍콩 독립' 주장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무시해 왔음.
- '홍콩 독립' 주장은 '대만 독립'처럼 도전적인 세력은 아니지만 외부 세력이 이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음. 비록 홍콩에는 서방체제하의 언론 자유가 존재하지만, '홍콩 독립'은 홍콩의 기본법에 저촉되며,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에 결코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됨. 국가와 홍콩특구는 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언행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함.

2. John Walsh 매사추세츠대학 퇴임교수: 서방의 간섭은 민주를 후퇴하게 해(환구시보, 1.16)

- 현재 홍콩에는 미국 민주재단, 기타 미국의 NGO 단체와 600명 정도의 미국 영사관 직원들이 있으며, 장기간 그들은 적극적으로 '민주'를 추진하였음. 대학의 젊은 '적극적인 세력'들을 고용하여 선두에 서도록 하였으며, 1,200명으로 구성된 홍콩특구 행정장관 선거위원회의 심사·결정 권한을 박탈하려 함. 이는 오히려 홍콩의 민주를 후퇴시키는 것임.

2. 중국의 대외관계

※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01 중-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 회의

※ 정보 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1 회의 개요

- 개최 일시 및 장소: 2015.1.8(목)-9(금), 중국 베이징
- 회의 주제: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기점, 새로운 기회: 중-CELAC 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추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
- 참석자: 중-CELAC 회원국 정상, 외교장관, 라틴아메리카 지역 일부 기구 및 기관 책임자 등 500여 명 참석
- Solis 코스타리카 대통령, Carrea 에콰도르 대통령,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Christie 바하마 총리 등이 개막식(1.8)에 참석하여 축사를 함.
- 중국측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가오후청 상무부장 등이 동 회의에 참석함.
- ※ 리커창 총리는 별도로 코스타리카 대통령 · 에콰도르 대통령 · 바하마 총리 회견(1.8), 각국 대표단 면담(1.9) 실시
- 주요 성과: △베이징 선언, △중-CELAC 5개년 협력계획, △포럼 운영 규칙 등 3개 문건에 합의

2 시진핑 주석 개막식 연설(1.8)

※ 시진핑 주석은 1.8(목) 중-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 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중-CELAC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새 장을 함께 열어나가자> 제하 연설을 발표

- 중-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회의 개최는 양측의 전체적인 협력이 구상에서 현실로 전환된 것을 상징하고, 중-CELAC의 협력 심화 및 공동 발전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인 동시에 남남협력(개발도상국 간 협력) 촉진과 세계의 번영과 발전에 깊은 영향을 줄 것임. 중국은 CELAC 국가들과 함께 중-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회의 개최를 새로운 기점으로 삼고, 중-CELAC 관계가 더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발전을 하도록 추진할 것임.
- 양측은 반년 전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중-CELAC 정상회의를 통해 평등 호혜, 공동 발전의 중-CELAC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중-CELAC 포럼 공식 설립을 결정하였음.
- 중-CELAC은 함께 동행하면서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중국과 CELAC 국가의 국토 면적을 합치면 세계 육지 면적의 1/5에 달하고, 인구 규모는 세계 총인구의 1/3이며, 경제 총량은 세계 경제 총량의 1/8에 달함. 이는 중-CELAC의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발전에 큰 강점이자 귀중한 자산임.

- ▶ 작년 7월 중-CELAC 정상회의 계기에 제시한 △중-CELAC 인프라 특별 차관, △우대차관 및 △중-CELAC 협력 펀드 등 일련의 협력 이니셔티브가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 중국은 이미 △5년 내에 CELAC에 장학생 쿼터 6,000명 및 중국연수 쿼터 6,000명 제공, △CELAC 국가 정당 지도자 1,000명 방중 초청 계획, △중-CELAC 지도자 1,000명 육성계획 실시에 착수하였음. 또한, △중-CELAC 과학기술동반자계획, △중-CELAC 청년과학자 교류계획, △2016년 중-CELAC 문화교류의 해 관련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국측은 상기 협력 사업에 CELAC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함.
- ▶ 중-CELAC 포럼의 향후 발전 관련 다음 4가지를 제안함.
 - 첫째, 상호 평등하게 대하는 협력원칙과 우호협상, 공동건설, 성과 공유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전체 협력의 정치적 토대를 공고히 해야 함.
 - 둘째, 호혜 공영의 협력 목표와 공동 발전이라는 기조를 견지하며, 조기 수확을 확보하고, '1+1은 2보다 크다'라는 효과를 실현해야 함.
 - 셋째, 유연한 실질적 협력 방식을 견지하고, 양자 · 다자 간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협력을 전개하며, 자신의 강점으로 상호 보완을 실현해야 함.
 - 넷째, 개방 포용의 협력 정신을 견지하고, 이익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 우리는 CELAC 이외 지역기구와 다자기구가 중-CELAC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함. 중-CELAC 포럼은 양측의 단결, 협력 및 남남협력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계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임.
- ▶ CELAC은 발전 잠재력이 가장 많은 신흥지역 중 하나이고, 동 지역 각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높이 중시하고 있는바, 이는 중-CELAC 관계의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발전에 더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 ▶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많은 개도국들의 공동발전을 연계시키고자 하며, 협력 및 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 ▶ 현재 중국 경제발전은 '신창타이(新常态)'에 진입하였고, 향후 일정시기 동안 중고속 성장을 유지할 것임. 이로써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더욱 많은 시장 · 성장 · 투자 및 협력 기회가 제공될 것임.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여 10년 내에 중-CELAC 무역액 5,000억 불 달성 및 중국의 對CELAC 지역 직접투자 누계액 2,500억 불 달성 목표를 실현할 것임.

3 왕이 외교부장 주요 발언(1.8)

※ 왕이 외교부장은 중-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1.8)하여 중국-CELAC 포럼의 설립이 △중-라틴아메리카 관계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남남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요지로 발언

- ▶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여 같은 길을 걷어가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함. 고위급 상호 방문 및 각계각층의 왕래를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 관련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상대국이 자국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 노선을 견지하는 것을 단호히 지지하고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정적 발전, 연합을 통한 국력 강화 등 중요한 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상호 이해와 지지를 해야 함.
- ▶ 양측은 호혜협력을 확대하여 공동 발전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함. '1+3+6'이라는 중-CELAC 협력에 관한 새로운 틀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국-CELAC 협력계획(2015-2019)'을 함께 실시해야 함. 또한 양측이 확정한 중요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며, 각자의 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그리고 심도 있게 어우러진 호혜협력 국면을 계속 공고히 해야 함.
- ▶ 양측은 인문교류를 강화하여 서로를 귀감으로 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함. UN, WTO, G20, APEC 등 국제기구 및 다자 메커니즘 프레임 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중요한 국제·지역 현안 관련 조율 및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CELAC 양자 및 여러 개도국들의 공동 이익을 수호해야 함.
- ▶ 양측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함. 개방과 포용,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각국의 이익 및 우려를 모두 배려하며 전체적인 협력과 양자 간 협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함. 또한, 중국-CELAC 포럼과 기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기구 간 대화 메커니즘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차원적이고 풍부하며 균형 잡힌 입체적 협력 프레임을 구축, 중국-CELAC 관계라는 이 거대한 배가 파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차원에서 원동력을 제공해야 함.
- ▶ 정층설계(頂層設計, TOP Level Design)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은 포럼 발전의 첫 번째 임무임. 중-CELAC 양측은 상호 존중, 평등 정신에 입각하여 일련의 문건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중-CELAC 포럼을 위한 정책적 근거와 행동 강령 및 메커니즘 보장을 제공해야 함. 이는 향후 포럼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
- ▶ 호혜협력 추진은 포럼 발전의 핵심 내용임. 중-CELAC은 각자의 우위를 발휘하고 호혜협력을 전개하여 중-CELAC 포럼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야 함. 동 회의 기간 동안 양측은 정치·안보·인프라 건설·에너지 자원·공업·농업·과학기술·인문 등 총 13개 중점 분야를 포함하는 <중-CELAC 협력계획(2015-2019)>을 공동 제정할 것임. 동 계획의 실천은 중-CELAC 협력을 질적 및 양적인 측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임.
- ▶ 후속 조치의 착실한 이행은 포럼 발전의 중요한 보장임. 양측은 공동 제정한 중점 협력분야 중에서 일부 구체적 협력 사업을 조속히 확정하여 조기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양측 국민들이 중-CELAC 포럼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최근 중국은 기타 개도국들과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협력을 전개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도 다양한 역내 및 다국적 협력을 일찍 시작하였는바,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음. 중-CELAC 양측은 상호 경험을 본받아 양측의 특징 및 수요에 부합하는 남남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음.

4 중국측 성과 발표(1.8 공동기자회견)

※ 왕이 외교부장은 중-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 회의 폐막 후 공동기자회견에 참석(1.8)하여 동 회의 성과에 대해 소개

■ 왕이 외교부장 주요 언급 내용

- > <중-CELAC 포럼 제1차 장관급 회의 베이징 선언>, <중-CELAC 협력계획(2015-2019)>, <중-CELAC 포럼 메커니즘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3개 중요 문건이 통과된바, 이를 통해 중-CELAC 포럼의 정책적 근거, 행동강령 및 메커니즘의 보장이 마련됨.
- △‘베이징 선언’은 포럼 구축 및 전체 협력의 전반적인 방향과 지도적 원칙을 확정하였고, △‘운영 규칙’은 포럼의 협조 메커니즘 및 운영 방식을 분명히 하였으며, △‘협력계획’은 향후 5년간 중-CELAC의 13개 중점 협력 분야 및 관련 조치를 확정하였는바, 정치 및 안보 · 무역투자 · 금융 · 인프라 · 에너지자원 · 공업 · 농업 · 과학기술혁신 · 인문교류 등 분야를 포함함.
- 작년 시 주석이 선언한 차관 관련 패키지 계획은 이미 실행되었거나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외에도 중국은 CELAC과 함께 인문 교류 확대를 위한 중요 이니셔티브를 잘 이행할 것이며, 기존의 중-CELAC 농업부 장관, 청년 정치인, 지방 및 싱크탱크 간 포럼과 중-CELAC 비즈니스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인프라 · 에너지광산 · 경제 · 공업 · 과학 기술혁신 · 사회정책 등 분야에 관한 새로운 포럼을 적극 발굴할 것임.
- > 중국과 CELAC 양측 모두 개도국인 동시에 신흥 경제 실체인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분명 천연(天然)적인 협력 파트너임. 양측은 아래와 같은 △여론, △정치, △이념, △경제 · 물질적 토대를 통해 태평양을 넘어 협력하게 되었음.
- (이론 토대) 양측의 민족해방을 위해 그리고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현대화 건설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두터운 우정을 쌓아 왔음.
- (정치 토대) 양측은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있어서 같거나 비슷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고, 양측 모두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 민주화를 주장하며 국제질서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념 토대) 양측 모두 발전을 국가 전략의 핵심 임무로 삼고 있는바, 발전 이념과 국정 운영 방면에서의 경험에 의한 교류를 강화하고자 함.
- (경제 및 물질 토대) 양측의 경제 · 통상 관계는 상호 보완적임. 양측은 자원 · 기술 · 자본 · 시장 등 방면에서 각자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큼.
- > 중-CELAC 협력은 제3국을 겨냥하지도 배제하지도 않음. 중-CELAC 국가 간 협력은 남남협력으로 개도국 간의 상호 지지를 뜻하는바, 각국이 전개하고 있는 기존의 기타 국가 또는 지역기구와의 협력을 대신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중-CELAC 협력은 상호 간의 수요와 공동 이익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음. 또한 중-CELAC 간 협력은 개방과 포용 그리고 균형적 이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바, 제3국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
- 개도국과의 협력을 전개할 때, 중국은 평등 호혜, 장점의 상호 보완, 협력 공영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왔으며, 협력동반자의 발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자주적 발전 능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점으로 함. 단순한 무역투자 혹은 자원 · 에너지의 거래가 아님.
- 인프라 건설은 중국과 CELAC의 다음 단계 협력의 중점요소 중 하나임. 중국에서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要致富先修路)’는 말이 있음. 이는 중국의 발전 경험이기도 함. 중국은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 높은 생산성, 선진기술 및 수준 높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 CELAC이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임.

5 리커창 총리 CELAC 대표단 면담(1.9)

※ 리커창 총리는 동 회의 참석차 방문한 CELAC 대표단 단장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면담

■ 리커창 총리 주요 발언 내용

- ▶ 중-CELAC 양측은 모두 개도국으로 발전 목표가 비슷하고 공동이익이 많음. 우리는 모두 세계 다극화 및 국제관계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 및 민생 개선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및 국제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음. 중-CELAC 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는 양측국민 간의 연계 및 소통을 강화할 것인바, 양측은 물론 지역 및 세계 발전과 번영에도 유리한 것임.
- ▶ 양측은 혁신적인 협력을 통해 무역·투자·금융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고, 자원 우위를 산업 우위로 전환시키며, 중-CELAC 간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공동 발전과 호혜 공영을 실현해야 함.
- 중국은 자국의 우수한 잉여 산업능력을 활용하여 CELAC측과 인프라 건설 등 협력을 전개해 나갈 용의가 있는바, CELAC측이 중국측 설비 등 상품들의 현지 시장 진입에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및 법률적 보장을 제공해 주길 바람.

02 왕이 외교부장 아프리카 순방(1.10-17)

1 케냐 방문(1.10-11)

※ 왕이 외교부장은 케냐 방문 계기 △대통령 예방, △중-케냐 외교장관 회담 등 일정을 진행하고 중국-케냐 양국 지도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케냐 대통령 예방

- ▶ (케냐타 대통령 언급) 중국 외교장관이 새해 첫 방문지로 케냐를 선택한 것은 양국 간의 전방위적인 우호관계를 보여주는 것임. 케냐는 현재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을 강력한 협력동반자로 보고 있는바,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할 수 있길 희망함. 케냐와 중국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각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전체의 이익에도 부합함.
- ▶ (왕이 외교부장 언급) 중국과 케냐는 좋은 친구·동반자·형제로서 시종일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왔음. 현재 새로운 정세 속에서 양국은 각자의 발전 전략을 서로 연계시켜야 하는 역사적인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중국은 케냐측의 발전 수요에 맞게 △농업, △인프라, △산업이전, △재생에너지, △생태환경보호, △인문, △평화 및 안보 등 7대 중점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 또한 금년은 UN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인바, 중국은 포스트 2015 개발 의제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케냐측과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공동 촉진할 것임.

2 수단 방문(1.11-13)

※ 왕이 외교부장은 수단 방문 계기 △대통령 예방, △외교장관 면담 △수단문제 관련 기자회견, △IGAD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 참석

■ 왕이 외교부장 기자회견(1.11) 내용

1. 수단 방문 의의

➤ 현재 수단은 정치·경제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있음. 금번 본인의 수단 방문은 '지지의 여행(支持之旅)'이라 하겠음.

- 중국은 △첫째, 국가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영토 보전을 위한 수단측의 노력을 지지하고, △둘째,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셋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수단측의 노력을 지지함.

2. 수단 석유 자원과 양국 관계

■ (질문) 양국 간의 석유 협력 감소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 양국 간 협력은 어느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 양국 수교 이후 상당기간 동안 수단은 석유를 채굴하지 못했지만, 양국을 서로를 지지하며 진심으로 협력했었음. 물론 석유 협력이 양국관계의 발전을 한층 더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각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계속될 것임. 또한, 우리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하고 농업 발전 및 가공제조업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음.

■ (질문) 중국측의 중재 노력은 석유이익 때문은 아닌지?

➤ 중국의 중재 노력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져야할 책임과 의무에 따른 것이지, 자국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님. 중국은 중재화 대사를 중국 정부 아프리카문제 특별대표로 임명하였는바, 중 대사는 최근 수년간 중국과 수단을 오가며 남북수단 화해 및 남수단 국내 충돌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 왔음.

3. 세계 평화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질문) 중국은 최근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 중국은 항상 세계 평화를 수호해 왔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제관계 기본규범에 따라 당사국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 쟁점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음.

- 일찍이 1980년대 우리는 캄보디아 문제 중재에 최선을 다하여 현저한 성과를 이룩한 후, 1990년대 이후 우리는 또 한반도 핵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를 수호하였음.

- 오늘날, 우리는 마찬가지로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와 당사국의 바람에 호응하여 각종

지역 및 쟁점 현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중국 특색의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는 이란핵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고, 시리아 문제 제네바 국제회의 등을 추진하고 참여하였음.

- 아프리카는 우리의 우호 국가이고, 많은 아프리카 친구들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아프리카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 수호를 위해 나름의 힘을 보탬 것임.

■ IGAD(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 회의 참석(1.12)

※ 왕이 외교부장은 1.12(월)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 남수단 총독 양측 그리고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 관련 각측과 'IGAD의 남수단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관한 협의회'를 공동 개최

➤ 왕이 부장은 'IGAD의 남수단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관한 협의회'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남수단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관한 아래 4가지 의견을 제시함.

- 첫째, 무기를 버리고 전면적으로 휴전해야 함. 총돌 양측은 남수단 국민의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이익, 역내 평화와 안정에서 출발하여 즉시 무조건 전면적으로 휴전해야 함.
- 둘째, 조속히 과도 정부를 구성해야 함. 양측은 기존의 협상 성과를 토대로 쇄불도 단김에 빼듯이 성의를 보이면서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공통점은 취하고 이견을 보류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남수단 과도 정부 구성에 관한 협상을 가속화해야 함.
- 셋째, IGAD가 중재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해야 함.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는 중재 및 정전 감독 등을 위한 IGAD 측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협조해야 함.
- 넷째, 남수단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함. 총돌 양측은 총돌 지역의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착실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 인도주의 도움의 진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국제사회는 원조를 확대하여 남수단 국민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함. 총돌 양측은 남수단에 있는 각국 관계자 및 기구의 안전을 전력을 다해 보장하고, 남수단의 국가 발전 및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인프라 시설을 잘 보호하여 남수단의 향후 경제재건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램.

■ 알 바쉬르(Al Bashir) 수단 대통령 예방(1.12)

➤ (바쉬르 대통령 언급) 양국관계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부단히 발전해 왔음. 양국은 실질적인 분야에서 남남협력의 모범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으며, 지역과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상호 이해하고, 상호 지지하고 있음. 중국측 제안으로 개최된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의 남수단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관한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남수단의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음. 양국관계는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바, 수단은 중국과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지역의 평화·안전 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갈 것임.

➤ (왕이 외교부장 언급) 중국은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전략적 차원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단과의 관계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신용과 명예, 우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국가임. 금번 방문은 수단이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관건적인 시기에 수단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임. 중국은 수단과 함께 잠재력을 발굴하여 전통 분야 협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동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협력 방식을 탐구하여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자 함.

- 중국은 동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 수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중국의 제안으로 개최된 '동아프리카 정부 간 개발기구(IGAD)의 남수단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관한 협의회'는 하루 동안의 집중된 상호 교류를 통해 5개 중요 공동인식을 달성하였음.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민들이 아프리카의 방식으로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안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유익한 시도였음.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수단측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3 카메룬 방문(1.13-14)

※ 왕이 외교부장은 카메룬 방문 계기, △대통령 예방, △총리 및 외교장관 면담, △카메룬 야운데 제2대학 공자학원 방문

폴 비야(Paul Biya) 카메룬 대통령 예방

- (비야 대통령 언급) 양국 수교 이후, 양국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경제·사회·기술 등 분야에서 매우 효과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음. 카메룬은 양국 우호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하며 중국의 핵심 이익 등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을 계속 확고하게 지지하고자 함. 또한, 중국과 인프라 건설·가공업·산업화 등 분야에서의 호혜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길 희망함.
- (왕이 외교부장 언급) 중국은 카메룬과의 전통 우의를 매우 중시함. 또한 카메룬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계속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돕고 상호 지지하길 원함. 중국은 시 주석이 제시한 '진실친성(眞實親誠)'의 동아프리카 방침 및 올바른 의리관(義利觀)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협력 공영의 이념에 입각하여 카메룬의 발전 수요와 중국 자신의 능력에 맞게 더 많은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고 각 분야 호혜협력을 추진코자 함.
- 카메룬은 '2035년 신흥국가 건설'의 발전 전망을 제시했고, 중국 또한 민족 부흥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하는 단계에 있는바, 양국은 발전 전략의 상호연계를 통해 공동 발전과 부흥을 실현할 수 있음. 중국의 수많은 우수한 생산력들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바, 중국은 실력이 있고 해외 투자 및 진출 용의가 있는 중국 기업들이 카메룬에서 발전 기회를 모색하도록 격려하고 지지코자 함.

4 적도기니 방문(1.14-15)

※ 왕이 외교부장은 적도기니 방문 계기 △대통령 예방, △외교장관 면담 등 일정을 수행하고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적도기니 외교부 건물 인계식에 참석

오비앙 음바소고(Obiang Mbasogo) 적도기니 대통령 예방

- (음바소고 대통령 언급) 본인은 적도기니와 중국 간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적도기니가 부상(崛起)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소중한 지지와 도움을 제공하고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았던바, 적도기니는 중국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함.
- 적도기니는 양국 호혜협력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적도기니는 '2020 비전계획'을 실시하고 산업화 과정 및 경제성장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면에서 중국측이 지지와 도움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길 희망함. 또한 아프리카 안보와 발전 실현을 위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함.

- (왕이 외교부장 언급) 중국은 적도기니가 중국의 핵심이익 등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측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며 적도기니와의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적도기니 국민들과 함께 서로 돕고 상호 지지하고자 함.
- 금번 적도기니 방문은 양국 수교 45주년을 기념하고 어떻게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심화할지 모색하기 위함임. 양국은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함. 또한 각자의 실정과 정세 발전에 따라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역경을 이겨내었던 전통적 우의를 호혜공영의 협력성으로 전환해야 함.
- 중국은 오비앙 대통령이 적도기니 국민을 이끌고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 노선을 모색하고 경제 다원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도기니의 산업화 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양국 산업 연계 및 협력 공영을 실현하고자 함.

5 콩고민주공화국 방문(1.15-16)

※ 왕이 외교부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 방문 계기 대통령 예방, 총리 및 외교장관 면담

■ 어거스틴 마타타(Augustin Matata) 총리 면담

- (마타타 총리 언급) 우리는 현재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련의 개혁을 전개하고 있는바, 2030년 신흥 경제국가 건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음. DR콩고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DR콩고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중국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성공 경험을 배우고자 함.
- DR콩고가 자국 실정에 부합하는 발전 노선을 실현하고, 나아가 농업 현대화 및 산업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중국의 도움을 희망함.
- (왕이 외교부장 언급) DR콩고는 풍부한 자연 및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요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바, 신흥 경제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DR콩고가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 노선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지지하며, DR콩고와 함께 국정운영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현재 DR콩고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놓여있는바, 해외 산업의 이전이 필요하며, 중국은 산업화 중·후반기에 놓여있는 상태로서 충분한 생산력, 우수 장비, 성숙된 기술 및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건설 능력을 지니고 있음.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DR콩고 산업화 발전에 있어 믿음직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

03 중·일 해상 연락 메커니즘 협의 관련

※ 2015.1.12(월) 도쿄에서 중·일 해상 연락 메커니즘 협의 개최

- (질문) 1.12(월) 중·일 양국은 해상 연락 메커니즘 협의를 개최하였음. 금번 협의의 성과와 다음 업무 계획을 소개해 주기 바람.
- 중국 국방부가 이미 관련 협의 상황에 대한 뉴스를 발표하였음. 중·일 양국 방위 부처는 1.12(월) 도쿄에서 해상 연락 메커니즘 제4차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였음.

- 양측은 지금까지 달성한 동 연락 메커니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방위 부처의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의 관련 내용 및 관련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합의를 달성하였음.
- 양측은 금번 협의의 기초 위에서 필요한 조율을 거친 후 조속히 본 메커니즘을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음.
- (질문) 중-일 간 해상 연락 메커니즘 협이가 다오위다오 분쟁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중국은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계속 순찰 항해를 할 것인지? 협의에서는 순찰 항해 정보 교류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는지?
- 다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함. 중국은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사실을 존중하며,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다오위다오 문제를 원만히 통제(管控)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함.

3. 한반도 정세

※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01 김정은 생일(1.8) 관련 중국측 반응

[정부]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8)

- (질문) 1월 8일은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생일임. 중국은 이에 축하의 뜻을 전달하였는지? 금년 중·북 관계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 (답변)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인바, 양국간 우호적 왕래를 해온 전통을 오랜 기간 유지해오고 있음. 중국측은 이미 북한측에 대해 축하의 뜻을 표시하였음. 중국은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 '제1서기'의 영도 하에 국가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하는 바임.
- 새해에 중국은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방침에 따라 중·북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9)

- (질문)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 우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중·북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북 계획은?
- (답변) 본인이 어제(1.8) 브리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듯이, 중국은 김정은 제1서기 생일을 즈음하여 축하를 전달하고, 김정은 제1서기의 영도 아래 북한이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길 기원한다고 하였음. 중·북은 우호적인 이웃국가인바, 우리는 북한측과 새해에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 방침에 따라(遵循), 중·북 간의 전통 우호관계가 한층 더 앞을 향해(向前) 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가기를 원함(願意).
- 두 번째 질문과 관련, 아직까지 제공할 만한 소식이 없음.

[언론]

■ 중·북 관계에는 대국들 간의 게임이 투영되어 있어(중국청년망, 1.9)

[장정 중국청년망 객원 칼럼니스트 기고문]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중·북 관계가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최악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네티즌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토로하고 있음.
- 한반도는 중국 동북지역의 천연 보호벽으로, 북한은 중국이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임.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에게 가장 골칫거리이기도 함. 러시아에게는 북한이 동아시아의 교두보로, 러시아는 북한이 서양의 손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북한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임.

- ▶ 한편, 중국의 부상을 복잡미묘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아태지역에서의 (군사) 배치를 지속 강화하고 한·미, 미·일 군사 동맹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고 하고 있음.
- ▶ 따라서 북·중 관계에는 대국들 간의 게임이 투영되어 있으며, 결코 단순하지 않은 관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은 같은 진영에 있는바, 다소 냉랭해질 수는 있으나 교착(僵) 상태에까지 이르지지는 않을 것이며, 전통적인 우의의 기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임.

02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중화권 언론 논평

■ 박근혜 대통령, 평화에 대한 성의 드러내(동방일보, 1.14)

[류싼찬 시사평론가 논평]

- ▶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남북한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도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 한국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과 '한미 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미국의 입장에는 분명 미묘한 차이가 있음.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성의를 충분히 드러내며 지역 긴장 완화를 이루겠다는 측면에서 출발한 것임.
- ▶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핵실험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인 입장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도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박 대통령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인 바 있음.
- ▶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어떠한 전제조건도 배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최고의 성의로 볼 수 있음. 이로써 이번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장담할 수 있음.
- ▶ 미국이 김정은의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가 북한보다 많기 때문임. 북한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태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 제재에 합세하였음. 만약 북한이 또 다시 4차 핵실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욱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결코 타협하려 하지 않을 것임.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강경한 방법으로 대응하여 남북 정상회담에 조건을 제시해 김정은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었음.
- ▶ 그러나 '삼국연의'에 대해 이해가 깊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전략을

가지고, '조건 없이'라는 말로 김정은에게 정상회담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물론,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 측면에서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음. 동문동종(同門同種)인 남북한의 통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인 사명임. 그러나 아태 지역으로 회귀하려는 미국에게는 분열된 남북한이 더 유리할 것임.

■ 한반도 정세, 기로에 놓여 있어(대공보, 1.14)

[연정(초대 주한 중국대사 장팅옌의 필명) 논평]

- ▶ 한반도 정세가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해지고 있음. 지난해 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새해 초에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한 간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하면서,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또한, 1.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남북 간 관계 완화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통일의 길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임. 이렇듯 남북한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음.
- ▶ 한반도 정세가 정말 완화될 것인지의 여부는, 남·북·미 모두가 평화와 안정의 정세에서 출발하여 냉전적 사고를 탈피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상호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분열을 해소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봄.
- ▶ 현재 눈앞의 최대 장애는 남·북·미가 여전히 예전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서로 대화하고 회담 하는 데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임.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군사훈련 중단' 제안은 사실상 북한이 한 발짝 물러나 양보한 것임. 한미 군사훈련은 '방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한반도에 불안정한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음. 북한은 줄곧 한미 군사훈련에 반대하며 이를 '위험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옴.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군사훈련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은, '임시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핵무기를 개발해 자국의 '주권을 지키려는' 일관된 입장에서부터 벗어난 것임.
- ▶ 이와 반대로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어 북한의 돌발 상황을 재촉하고 있음. 물론, 이것은 북한의 무력 과시나 핵 개발과도 관계가 있지만 한·미 양국은 근본적으로 '압력으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를 대화로 풀어가자고 주장하는 등 비교적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즉각 반격할 것이라는 등 북한에 대한 고도의 경계를 여러 차례 강조함. 또한 미국이 얼마 전 한·일 양국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에 합의한 것 등은 한반도에 불안정 요소를 증가시키는 것임.
- ▶ 최근 한·미 양국이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필자는 동 훈련이 남북한 및 북·미 간 대화를 바라던 희망이 무산될까 우려스러움.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중국은 줄곧 관련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바란다고 주장해옴.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가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되어가길 바람.

03 北의 '한미 연합훈련-북핵 연계' 제안 관련 中측 반응

[정부]

■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12)

- (질문)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북한측은 미국이 올해 한국 및 주변지역의 모든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한다면 북한측은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는 제안을 관련 채널을 통해 이미 미국측에 전달하였다고 함. 미국무부는 북한이 한·미 연례 군사훈련과 핵실험 가능성을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실상 이는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하면서 북한측이 만약 새로운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 입장은?
- (답변)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였음. 중국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음. 우리는 관련 각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술한 목표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희망함. 우리는 정세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반대함.

[언론]

■ 한·미, 2015년 들어 첫 연합훈련 실시 예정(환구시보, 1.12)

- 미 해군 7함대 소속 머스틴함(9,200톤급)은 1.11(일) 한국 동해상에 입항, 13일부터 이틀간 한국 광개토대왕함(3,200톤급)과 함께 동해상에서 정례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이는 한·미의 첫 연합훈련임.
-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하여 한 중국 군사전문가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수가 너무 많아 모두 정확히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한·미는 매년 백 차례 이상의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매년 2-3월 중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과 10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인 동시에 북한이 가장 큰 반감을 드러내는 훈련이기도 하다. 동 훈련은 모두 실전 훈련으로서, 국경을 넘거나 가상으로 북한 지도자를 '참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함.
- 환구시보가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북한 시민들은 한미 연합훈련에 매우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북한 노동자(자동차 수리공)는 "만일 미국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곧바로 군에 지원하여 모두 무찔러 버리겠다"고 밝힘.
- 한편, 1.11 런웨이동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핵실험도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 제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다"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함.
- 한미 연합훈련과 핵실험을 연계시켜 북한이 '네가 그만두면 나도 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동을 취한 것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네가 하면 나도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음. 이는 북한의 호의와 위협의 수준이 한층 더 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선택의 폭도 넓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는 대북정책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러한 정책의 기본 내용은 '한반도 긴장 국면 유지'가 될 것임.

■ 북한은 미국에 '핵실험과 군사훈련 연계' 관련 진일보된 설명을 할 용의가 있어(환구시보, 1.14)

[주중 북한대사관 공보참사관 단독인터뷰 기사]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시 핵실험 잠정 중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 주중 북한 대사관 공보참사관은 1.13 환구시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북한의 입장을 밝힘.
- 북한 정부의 동 제안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해소, 긴장 국면 완화,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한 조치였으나, 미국은 이를 '암묵적 위협'이라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핵실험을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음.
- 비록 지금까지 한미 연합훈련은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님. 지난 1992년 미국은 북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 북한측과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 만약 미국측이 북한의 동 제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필요로 한다면 북한은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용의가 있음.
- 만약 미국이 오로지 북한만을 겨냥하여 한국 및 기타 국가들과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임.
- 미국이 올해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한다면 한반도에서 수많은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음. 미국은 마땅히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04 한반도 정세 관련 언론 기고문

■ 2015년 한반도 정세 예측…시작은 좋으나 전망은 불투명(신화망, 1.9)

- 가오하오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은 신화망이 개최한 제5회 '중론천하(縱論天下)' 국제문제세미나에 참석,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연설을 발표함. 가오 연구원은 남북한 지도자 모두 신년사를 통해 대화 및 정세 완화에 대한 염원을 드러냈다면 이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함.
- 한편, 가오 연구원은 이러한 좋은 시작의 지속 가능성 및 그에 상응하는 성과 도출 여부, 특히 8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며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힘.
 - 작년 한반도는 중대한 긴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으나, 평온함 속에서도 잠재적인 문제들이 적지 않은바 잠재적 '활화산'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활화산이 폭발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방비해야 할 것임.

■ 중·북 관계, 한·중 관계만큼 긴밀하지 않아(신경보, 1.14)

- 엔쉐통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2015년 중·북 관계가 정상화 될지 여부와 관련하여, 확실하지 않다(并不確定)면서 다음과 같이 밝힘.
 -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 확대되고 있는바, 2015년 한·중 관계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임. 한편, 중·북 관계는 한·중 관계만큼 긴밀하지 않음. 중국 지도자는 각국

지도자, 심지어 아베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가졌는데, 북한 지도자와는 만난 바 없음. 2015년 중·북 양측 간 더욱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 北 외교의 방향, 이제 한·미를 향하고 있어(신화망, 1.15)

[가오하오룽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연구원 기고문]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18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1.15 싱가포르로 떠남.
- 이렇듯 올해 들어 북한은 6자회담 재개 희망의사를 내보이고 또 다시금 미국과의 직접대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외교 행보는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작년 북한의 외교활동의 주요 방향이 러시아와 일본을 향해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 방향이 한국과 미국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 간 대화 진전에 있어 미국은 매우 관건이 되는 요소임. 미국은 소니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대북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으나, 그럼에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 시 핵실험 잠정 중단’을 제안했으며, 동 제안이 거절당한 후에도 미국과의 직접대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음.
- 북한은 한·미 동맹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부터 접근하여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름길로 보고 있음.
- 올해는 한반도 해방 70주년인 동시에 한반도 분단 70주년이며, 이는 남북 지도자 모두에게 특수한 의미를 부여함. 미국은 한반도 해방의 공신이자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이기도 함.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 수호를 위한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뿐인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및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지금, 미국은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임.

4. 대만정세 및 양안관계

※ 게재된 내용은 외교부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01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처의 국기 게양식

■ 중국외교부 정례브리핑(1.5)

- (질문)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처가 1.1(목)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 입장은?
- (답변) 중국은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만 당국의 기관이 소위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측에 이미 엄정히 항의(交涉)하였음. 중국은 미국측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과 3개의 중·미 간 공동코뮈니케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정례브리핑(1.14)

- (질문) 금년 1.1(목) 주미국 대만 경제문화대표처가 국기 게양식을 거행하였는데, 대변인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답변) 이에 관해서는 외교부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음. 국무원 대만판공실 또한 대만측에 입장과 태도를 표명하였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위반하는 모든 언행을 단호히 반대함.

■ 중국 언론 보도

'국기 게양식'에 대한 미국의 비판, 대만이 자초한 것(환구시보, 1.8)

-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주재 대만 대표부가 대만 국기를 게양한 사실을 비판하고 미국과 대만 간 '비공식 관계'에 대한 대만 당국의 이해에 실망한다고 밝혔음. 국기 게양을 통해 '새로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득의양양하던 대만은 실망이라는 미국의 공식 태도에 대해 당황스러울 것임.
- 일부 대만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만능 후원자(靠山)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제공할 수 있는 '보호'를 과대평가한 것임. 지금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며 대륙이 점차 강해지면 언젠가 대만은 미국 외교의 '부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만은 국기 게양식이라는 꼼수(小動作)보다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의 진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함.

마크 짐머(Mark Zimmer) 미국대만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 대변인(1.8)

- 미국은 금번 사안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고, 또한 사전에 알지 못함. 미국은 금번 사안에

관해 실망을 표하며, 대만 및 미국 내 대만 정부 고위층에 관해 우려를 표함. 금번과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함.

02 중국의 대만해협 신규항로 개설

※ 2015.1.12(월) 중국 민항국은 대만과 마주한 중국 동남해 연안 상공에 총 4개의 신규항로(M503, W121, W122, W123) 개설 계획을 발표

※ 정보 출처: 중국시보(1.13-14), 연합보(1.15), 자유시보·왕보(1.16)

■ 대만측 입장

1. 대만 교통부

- ▶ 선치(沈啓) 대만 교통부 민간항공국장(1.13): 중국이 비행고도, 상호 통보·협상 메커니즘 구축 등 신규항로 개설 관련 대만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길 희망하며, M503 노선도 서쪽(중국 내륙쪽)으로 이동시키길 바람.

2. 대만 국방부

- ▶ 메이자수(梅家樹) 대만 국방부 참모본부 작전계획 조리차장(1.13): 대만 국방부는 대만해협 상공 동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바, 만약 통보 없이 대만 영공에 침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나약하게 대처하지 않는(不畏懼, 不回避, 不示弱)' 원칙에 의거하여 요격, 감시 등 조치를 통해 대만 영공을 수호할 것임.

3. 대만 외교부

- ▶ 린용러(林永樂) 대만 외교부장(1.15): 중국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항로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 중국은 동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식 신청절차를 마치지 못했는데, 여전히 개선 및 수정이 가능함.
- 대만 대륙위원회, 민항국 등과 협조하여 미국 등 주요국가 및 ICAO에 대만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며, 미국은 대만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음.

4. 대만 대륙위원회

- ▶ 왕위치(王郁琦) 대만 대륙위원회 주임위원(1.12): 중국 대만판공실에 중국의 신설 항공노선 수용불가 의사를 밝혔으며, 후속조치로서 향후 교통부를 통해 중국에 대만의 입장을 지속 전달할 것임. 중국이 국제민간항공 정신에 의거하여 동 문제 관련 대만과 지속적으로 협상하도록 요구할 것임.
- ▶ 우메이홍(吳美紅)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1.15): 대만 대륙위원회는 이미 양안 간 연락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신규항로 발효날짜인 2015.3.5(목) 전까지 항로개설 문제 관련 양안 간 협의를 요구했음.

5. 대만 정계

- 왕진핑(王金平) 대만 입법원장: 중국의 신규항로 개설문제에 대해 항의 및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임.
- 민진당: 중국의 신규항로 개설은 대만해협을 자국 영해로 흡수하려는 행보이자 대만의 주권을 침해하는 처사인바, 입법원이 적극 나서 대만 정부가 중국측에 항로개설 반대 입장을 전달하도록 요구해야 함.
-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주석(1.14): 중국의 신규항로 개설 결정은 대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민간항공 정신에도 위배됨.
 - 대만 정부는 반드시 중국측에 항로개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 대만의 국가명예와 국익을 수호해야 함.

■ 중국측 입장

1.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1.15)

- (질문) 중국 민항국이 중국 동남부 해역에 새로이 개설한 민항 비행노선에 대해 1.14(수) Harf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 항공 안전의 유지 및 강화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안(關切)이라고 밝혔음.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는지?
- (답변) 최근 들어, 대만 해협 서안지역의 항공편 통행량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는바, 항로 정체 현상이 심각하고 항공편 연착률이 매우 높은 상황임. 상하이 비행 정보구역 내에 관련 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관련 구역 내 비행안전 수준을 높이고, 승객 권익의 보장에 필요한 동시에 중국민항의 발전에도 필요한 일인바, 이는 중국 민항공역(空域) 관리의 일상적 업무임. 일찍이 2007년에 중국 민항국은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함께 협력하여 동 항로에 대한 안전평가 업무를 마쳤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이를 비준하고 항로 코드를 부여 하였음.

2.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

- 중국이 새로이 개설하는 M503 항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로개설 기준에 부합하며, 동 항로의 정밀도 및 안정성 또한 국제규범에 부합함.
- 중국의 신규항로 개설은 중국의 경제발전 상황 및 민간항공산업의 수요에 의한 결정으로, 중국은 경제적 · 전문적 각도에서 항로개설 문제를 고려해 결정한 것인바, 대만사회가 동 결정에 대해 의심보다는 이해의 폭을 넓혀주길 희망함.

3. 추청핑(儲呈平) 중국 민항국 대변인(1.13)

- M503 항로 개설은 중국의 민간항공관리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며, 실제 운항 시에는 영공관리부처를 통해 인근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안전운행을 보장할 것임.
- 중국은 2007년 이미 미국 등 국제항공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M503 등 신규노선에 대한 설계 및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음.

■ 미국측 입장

- ▶ 마리 하프(Marie Harf) 미 국무부 부대변인(1.14): 미국은 중국이 신규항로 개설문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주변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비행안전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함. 이것은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함.
- (중국의 신항로 개설이 미국의 관련지역 국익에 위배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에게 있어 안보이슈는 매우 중요한 의제임.

03 주리론 대만 국민당 신임 주석 당선

- ※ 2014.11월 대만 지자체 선거의 패배로 마잉주 총통이 국민당 주석직 사임 후 개최된 당 주석 보궐 선거(2015.1.17)에서 주리론 신베이 시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득표율 99.61%로 당선됨.
- ※ 정보 출처: 국민당 보도자료(1.17) / 연합보·중국시보·자유시보(1.18)

1 대만 내 반응

■ 차이잉원 민진당 주석은 주리론 신임 주석의 당선 축하 성명서를 발표

- ▶ 차이 주석은 주리론 신임 주석과 함께 대만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을 함께 해쳐나가기를 기대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향후 조속히 <국시회의(國是會議)>를 개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자고 언급함.
- ※ 국시회의: 1990년대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당시부터 대만 여야 정당 및 민간 인사들이 모여 대만의 정치, 경제 등 주요 중대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
- ▶ 차이 주석은 국민당 당사에 신임 주석 당선을 축하하는 대형 화환을 발송했으며, 동 화환에는 '차이잉원'이라는 이름만 표기되었고, '민진당 주석' 직함은 표기되지 않음.

■ 대만 언론 반응(중국시보)

- ▶ 주리론 주석의 득표율 99.61%는 최근 15년간 가장 높은 득표율인바, 이는 동인의 높은 인기와 정치적 실력을 보여주는 것임.
- 주리론 주석은 현재 신베이 시장으로, 중앙정부의 자원을 동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바, 마잉주 총통(중앙정부), 왕진핑(입법원) 등과 원활한 협조를 취하여 향후 정국을 주도할 전망
- 한편, 대만 주민들은 마잉주 정부의 양안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바, 향후 국민당의 양안정책 또한 조정이 필요

2 중국측 반응

■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정례브리핑(1.14)

- (질문) 국민당 주석 보궐선거가 이번 주말에 개최됨. 중국측은 새로운 국민당 주석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 (답변) 2008년 이후 양안관계는 국·공 양당 그리고 양안 동포의 공동 노력 하에 '대만 독립' 반대, '9.2 컨센서스' 견지 등 공동의 정치적 토대 위에서 평화발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여, 대만해협 지역 안정에 기여했으며, 양안 주민들을 위한 복지를 창출해 내었는바, 양안 동포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국민당에 새로운 주석이 선출된 이후에도 우리는 양측이 기존의 정치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접촉과 교류를 유지하면서 서로 마주보며 함께 나아가고(相向而行)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희망함.

■ (질문) 국민당은 1.17(토) 보궐선거를 통해 당 주석을 선출할 예정인데,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는 관례대로 신임 국민당 주석에게 축전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 (답변) 2008년부터 국·공 양당 및 당 지도자들은 접촉을 유지해왔고, 일부 긍정적이고 유익한 관례를 만들어 놓았음. 이러한 좋은 관례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중국외교부 정례브리핑(1.15)

■ (질문) 주리룬(朱立倫)이 후임 국민당 주석이 될 것으로 예측됨. 중국은 그가 다음 대만 '지역' 지도자가 될 것이라 보는지? 만약 그가 당선된다면 양안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 (답변) 이 문제는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답변 범위에 속함. 하지만 중국은 양안관계가 평화적 발전의 양호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바, 이는 대만해협 양안 인민들의 공통된 이익에도 부합함.

■ 시진핑, 주리룬(朱立倫) 대만 국민당 신임 주석 당선 축전 발송(인민일보 해외판, 1.19)

➤ 시진핑 주석은 1.17 주리룬 대만 국민당 부주석이 당일 선거를 통해 신임 주석에 당선된 데 대해 축전을 발송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최근 몇 년간 국·공 양당과 양안은 공동 노력으로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이라는 양호한 국면을 열었고, 양안 동포가 얻는 이익이 많아지면서 양안관계 발전에 대한 더욱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양당이 민족적 대의를 견지하고, '9.2 컨센서스'와 '대만독립 반대'라는 공통된 정치적 기초를 굳건히 견지하기를 희망함. 또한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양안관계의 평화·발전을 지속 추진하여 양안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민족부흥의 위대한 업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함.

주리룬 신임 주석, 시진핑 주석의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 국민당과 공산당은 지난 6년(2008~)간 '9.2 컨센서스'의 기초 하에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양안 평화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 구축에 이바지함.

- ▶ 양안 주민은 중화민족의 성원이며, 대만과 중국은 공통점을 찾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향후 국민당과 공산당은 양안 교류협력 및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04 대만 경제

■ 마잉주 총통: 對중국 의존도 높아지지 않았음(Taipei Times, 빈과일보)

- ▶ 마잉주 총통은 대만인들의 생각과 달리 대만의 對중국 무역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본인 집권 이후 일본, EU, 미국, ASEAN 등 수출 대상국을 다각화하여 대만의 대외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언급함.
 - 2000년 중국이 대만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였으나, 2008년에는 40%로 상승하였고, 2014년 39%를 기록
- ▶ 마 총통은 중국의 23개 주변국 중 17개국에서 중국이 최대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간 상호의존도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 한편, 한-중 FTA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 대만이 주요 무역대상국들과 외교관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대만은 지금과 같은 한국과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대만 신년 금융정책 발표(왕보)

- ▶ 정밍종(曾銘宗)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주임위원은 1.6(화) 신년기자회견 시, 대만 은행 중국 지부의 2014년 수익이 2013년 6~7억 대만달러에 대비 3~4배 증가한 25억 대만달러를 기록했고, 보험업 또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곧 투자금 회수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 정 주임위원은 동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아시아 금융관리 로드맵 제출 가속화, △수입 대체 방안, △금융 3.0 계획, △군중 모금 계획, △아태 금융 중심 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혁신산업 지원 계획, △전자상거래 발전 협조 등 2015년 새로운 금융정책 12개를 발표함.
 - (동 금융정책에 '양안금융' 관련 사항이 빠져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 주임위원은 양안 금융협력은 현재 교착상태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최근 양안 금융교류의 주안점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바, 향후 정책의 상당수 업무를 양안 금융업무에 융합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중국인의 대만 증시 직접투자 방안, 금년 3분기 시행 예정(왕보, 중국시보)

- ▶ 정밍종(曾銘宗)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주임위원은 중국인 관광객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주식 및 보험증권 등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금년 6월 내로 한도, 통화,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 포함 여부 등 세부 사항이 담긴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이르면 이번 3분기부터 동 방안을 시행할 계획

- ▶ 대만 증권계는 지난해 300만 중국인 관광객이 대만을 방문한바, 그중 3%가 계좌를 개설하고 1인당 평균 20만 대만달러를 투자한다며, 대만 증시에 180억 대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으며, 동 방안은 동남아 지역 및 전세계 화교 자금을 유치하여 대만이 아태지역의 금융 중심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함.
- 한편, 동 방안의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투자 종류 및 한도액 등 제한이 과도할 경우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반면, 규제가 불완전할 시에는 자금 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대만 증권교역소 신년 기자회견(왕보)

- ▶ 리수더(李東德) 대만 증권교역소 회장은 1.9(금) 신년 기자회견 시, 중국인의 대만 증시 직접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외국 투자자에게도 대만 증시를 개방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대만 증권교역소는 싱가포르와 '대만-싱가포르 증시 간 교차거래(臺星通)'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며,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